

복합쇼핑몰 유치 내건 국힘, 광주서 첫 예산정책협 연다

권역별 순회 개최 광주 선택 시 입장 듣고 당 차원 지원 논의 국힘 시당 “복합문화공간 돼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광주 민심을 공략한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유치에

힘을 보낸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중순께 광주에서 예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순부터 권역별로 예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민의힘이 첫 개최지로 광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광주 현안을 청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백화점그룹의 참여 선언으로 공식화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27년 만에 광주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용남 의원이 참석해 시와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 경제 낙후 대표 사례로 복합쇼핑몰이 없다는 사실을 들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 민심을 파고 들었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한다”면서 광주시에 몇 가지 당부를 했다.

우선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몰’의 개념이 아닌 여가·휴식·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접목되는 ‘복합 문화공간’ 방식으로 맞춰 사업을 추진하길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에 건립된 복합쇼핑몰들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광주에도 복합쇼핑몰이 건립될 시 일대에 교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

지 선정을 고민하고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놀이공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부재, 새벽배송 불가 문제 등 광주지역 생활SOC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시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우원식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

“李, 출마뎀 시대정신 입증해야”

더불어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은 7일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그와 경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앞서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불출마를 권했다고 한다.

우 의원은 “본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출마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했다”면서 “계파 갈등의 빌미로 혁신 구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사법 리스크를 부풀리려는 정권 입장에서 당 전체를 혼

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행정의 공간에서 본격적인 정치의 공간으로 이제 막 옮긴 만큼 전대 출마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더 많은 의원들과 협력하며 이 의원의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키워가는 단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희미해진 불평등·불공정 해소라는 시대정신으로서의 이재명다움을 되찾는 과정을 시간을 두고 밟아가길 권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면 대세가 아닌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꿀 시대정신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탁 쳐줄 갈등이 크게 격정되나 잘 극복해 이재명 의원 본인과 당을 성공 가도로 이끌길 기원한다”고 썼다. /연합뉴스

친명계 ‘룰 전쟁 완승’에 어대명 굳히기...李 등판시점 촉각

최고위 권한 강화 움직임 주시 친문-86그룹 연대 가능성도 호남 민심 ‘어대명’ 반응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룰 갈등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이 굳혀지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내외의 시선은 사실상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에도 대거 진입, 사실상 민주당을 접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고위원 권한 강화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명문화할 경우 당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 대표의 차기

추선 공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게 되면 전대 룰에 관계없이 대세론이 형성되는 상황이었다”며 “핵심은 최고위 권한 문제로 당 대표의 권한이 제한된다면 당권을 잡아봐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구백 전 당대회준비위원장은 ‘대표 권한 약화안’에 대해 선을 긋기는 했으나 실제 논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준위 토론을 거쳐 최종안이 나오겠지만 찬반이 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대 룰이 친명계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최고위의 권한 강화 결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준위는 8일 마지막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어대명’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고위 진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진출시켜 차기 총선에서 당권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 벌써 친문(친 문재인) 진영과 86그룹의 연대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어대명’ 프레임에 대한 호남 민심의 반응도 주목된다. 호남 민심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이재명 고문이 당권을 장악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호남 민심의 심정적 반발은 언제나 정치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호남 최고위원 주자와 이재명 고문 측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혁신을 토대로 친명계와 호남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 최고위원 주자가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친명계와 86 그룹과의 연대론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친명계와 호남의 연대론이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은 후보 등록일(17~18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 초 등판이 예상됐으나 출마 선언부터 당권 경쟁자들의 웅단폭격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기승전 ‘탈원전’”, 에너지 위기 못 막아”

재생에너지 확대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원전 산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에너지 위기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6명은 이날 성명에서 “기승전 탈원전 및,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한가히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 산업을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대도시 주

변 원전 밀집으로 원전 사고 위험도도 매우 높고, 아이들에게 떠넘겨지는 핵폐기물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립 전력망이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다”며 “원전을 늘린다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건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갹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